



세무·회계·경영(TAM) 쟁점뉴스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업체... 세무조사 유예한다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내놔다.

신종 CV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병·의원 등(사치서 유흥업소 제외)이다. 이들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가 유지된다고 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또는 중지)된다.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된다. 단,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자료는 제외시킨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는 세정상 혜택을 받는다. CV 사태가 지속됐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되고, 체납처분(압류 부동산 등) 집행은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완화... 소·부·장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후 7년간 고용 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100% 이상 유지하면 된다(사후관리요건).

총급여 기준을 선택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합계액(최대주주,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으로 따진다. 이때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중분류 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본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존 기술, 인력활용 등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등 목적으

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대상으로는 소부장 특화선도 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사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해야만 공동투자자로 본다. 투자대상기업은 3년 내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지출해야 한다.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 연내 기존 주택 팔아야 양도세 면제 된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된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한시적 배제). 기존엔 양도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된다.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엔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그간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이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다.